

大學의 民主化



崇實大 總長 趙 要 翰

6·29 이후 대학의 자율이 선포됨으로써 대학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3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학생 처벌에 대한 문교부의 지시가 없어졌다. '71년 이후 계속되던 교련과 국민윤리 과목이 철폐되었고, '75년 이후 실시되던 학도호국단이 이미 '84년부터 선거에 의한 학생회 구성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변화들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대학의 민주화가 우리들이 소망하는 대로 쉽게 성취되지는 못했다. 각 대학에서 연일 학생 데모가 있었고, 게시판의 대자보는 '지성의 도시'답지 않은 내용과 표현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의 폭력 시위에 교직원들은 물론 일반 사회인들이 건전한 사회발전의 앞날을 우려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날 4·19와 10·26 이후에 시도되었던 민주화가 번번히 실패되었는데, 이번만은 민주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해방 후 우리의 교육 목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弘益人間으로서 이는 곧 민주 시민의 양성이고, 민주 제도 역시 폭 넓은 인간교육에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등교육과 민주주의는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라는 낱말은 '70년 이후 한국 지성인에게는 거의 신앙적인 개념이었는데, 막상 대학이 민주화 과정에서 심한 진통을 겪게 되어 안타깝다.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폭발적이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재단의 전입금 증액 요구는 물론 학과의 사무실 외에 학회 사무실과 모든 학생 씨클이 사용할 수 있는 방과 집기를 요구하였다. 총장 선거를 포함한 모든 대학 운영에 학생 참여를 요구하였다. 나라의 정치 문제를 이슈로 하여 시험 연기를 주장하기에 이르러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은 대학의 민주화 수행에 회의를 품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의미에서 대학은 '학술의 수도원'이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대학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공중을 위한 주유소'의 구실을 담당한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이 학생조합(universitas)으로 운영되던 불로냐대학의 방식으로도 또 교수들이 학부(faculté)를 중심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했던 파리대학의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현대 대학은 단일 공동체가 아니다. 대학은 많은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만의 요구에 의하여 대학이 좌우될 수는 없다. 대학은 학부,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직업대학원, 비학자 요원, 행정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은 교수, 학생, 행정 당국

외에도 일반 사회와 연결되는 이사회와 동문회 그리고 교회, 경제 단체, 노동 조합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민의 옷(타운)과 대학의 옷(가운)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은 옥스브리지의 고전적 개념이지, ‘흰 타일’ 또는 ‘판 유리’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대학에서는 시민과 대학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래서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외 구성원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대학 문제는 교수와 학생의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거대 대학이 된 오늘에 있어 옥스브리지에서와 같이 교수가 학생들의 ‘부모의 위치에서(in loco parentis)’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났다. 대학 운영에서 직원과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때 교수와 직원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의 정열과 순수성을 통하여 그리고 대화에 의하여 대학의 민주화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민주교육은 인문교육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간(homo concors)’을 양성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학의 민주화는 교수 사회, 직원 사회, 학생 사회가 각각 자기 목소리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각각의 구성체는 다른 구성체의 의견과 행동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때 견해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장려되어야 한다. 대학의 민주화에서 각 구성체는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이 자제력만이 한국 대학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대학이 누렸던 정교수만의 결정에 의한 대학의 자치는 이제 과거의 사실이 되었고, 한편 1968년 5월 소르본느대학을 점령한 ‘학생점령위원회’가 내걸었던 지나친 요구 조건들은 역사의 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의 구성체들이 각각의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되 자기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변모하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회 변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1년만에 전체 인구의 23.9%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변화 많은 나라이다. 또한 한국인의 학습 의욕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작년의 대학 입학 경쟁률은 4:1이었는데 금년은 경쟁이 더욱 심할 것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회 변화와 학습 의욕에 부응하여 정부는 대학에 획기적인 국고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대학은 오늘날 폭발하는 젊은 세대의 갈등을 건전하게 소화·흡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대학이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개혁되지 않으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때 새로운 과학을 절대시했던 것같은 과오를 남길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지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1968년을 전후한 서구의 학생운동에 의한 대학 교육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총장을 지냈던 클라크 카 박사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첫째로 '60년대말 학생들이 제기했던 대학 개혁이 학문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둘째로 '60년대말의 학생들에 의한 대학 개혁이 과도한 요구를, 그것도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 우리는 20년 전에 있었던 서구의 학생운동을 한국 대학의 민주화 과정에서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대학의 점진적이고도 효율적인 개혁을 위해 외부의 정치적 흐름과는 관계를 끊고 대학의 변혁을 주장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대학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각 구성체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지 말고 각 구성체의 의견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교수 사회, 학생 사회, 직원 사회뿐만 아니라 동창 사회 그리고 연관된 사회 집단들의 자기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만이 한국 대학이 민주화되는 길이다. *